

1980년대 후반의 양돈정책

1979년도의 극심했던 양돈불황으로 축산관측제도가 도입되었고, 1984년도의 불황으로 축산업을 개정(의원입법)하여 양돈업 등록·허가제를 도입, 생산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흡했던 개량분야를 확대 보강하여 종돈업의 등록제 실시 및 능력검정제도를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양돈업체에 대한 개량의무를 부과하고 명문화하여 사육규모간의 갈등해소와 규모간 역할분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양돈업이 완전 자유업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대가축에 비하여 전·기업화가 빨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부업적 양돈은 점차 사라져 그 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세는 농촌인력부족, 농촌경제의 침체, 문화생활에서의 소외, 규모 경제에서의 불리 등 주변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생각된다.

1980년대의 고도의 경제성장, 고도의 양돈발전을 계기로 1986년에는 정부기구를 개편하여 과거 축산국에 축산과, 낙농초지과, 사료과, 가공이용과, 가축위생과를 분산시켜 축산과, 대가축과, 중고가축과, 초지사료과, 가축위생과로 개편, 중소가축분야를 확대보강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양돈산업도 전문화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시책 중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다루고 있는 수급 및 가격안정시책을 생산단계부터 컨트롤하게 되었으며, 축산관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육두수와 가격전망을 사전에 홍보하여 양돈농가들의 자율적 생산조절을 유도함으로써 큰 폭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주기를 최소화하여 양돈산업의 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종돈개량체계를 정비 발전시키고자 종돈업등록제 실시와 함께 종돈 300두 이상 보유업체에 대하여는 돼지 순수계통조성을 의무화하여 개량주도를 민간차원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각종 제도적 뒷받침과 결부하여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였다. 그 결과 1985년에 172톤에 불과했던 대일본지역 돼지고기 수출이 1986년에는 7,936톤으로 증가하여 41,000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므로 1980년대를 양돈산업의 성장과 변혁을 가져온 양돈산업의 전성기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축산연감 1989~90 농수축산신문)